

“백신 접종 차질없이 실행해야”

문 대통령, 靑 수보회의 모두발언

“백신, 국제정치 현실 직시… 우리 형편 맞게 접종
백신 정착화로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난에 따른 각국의 ‘백신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적하며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을 강조하는 한편,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치권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백신 문제의 정치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 모임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네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밀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금하지면 연한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돼 국경 통제와 백신 수출 통제, 시제기 등으로 각자생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국

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해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접종면역도 더 확장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스

“미얀마 국민 민주주의 회복 응원”… 세 손가락 경례

도의회, 미얀마 국민 지지

군부 폭력 등 중단 촉구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며 응원했다.

도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폐회 이후, 미리 구매한 미얀마 사랑 티셔츠를 입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 및 무차별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과 미얀마 민주주의 조속한 회복 촉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요구했다.

송지용 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미얀마 사태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만은 없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탄압과 유혈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폐회 이후, 미리 구매한 미얀마 사랑 티셔츠를 입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축종 따른 축분관리 방식 달리 해야”

최영일 도의원, 부숙도 겸사

의무화 시행 따라 축분 처리

효율성 향상 위한 대안 제시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숙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되는 도내 여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의원은 26일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기축분뇨 부숙도 겸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축분고속밀폐시설과 퇴비액비 살포기와 살포비 등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도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겸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자칫 다수의 범범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양계장에서 계분 처리장’을 우시에서는 축류 송통기를 이용하면 축분량을 줄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은 “기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축분뇨 수거와 처리비용을 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농·축협,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를 통해 분뇨처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기축분뇨 관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국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유호상 기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의결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해 이들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화했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위원 자격조건을 전문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호상 기자

“지방하천구역 지정 도민 소유 땅 보상 대책 마련을”

강용구 도의원



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또, 그는 “하천 정비사업을 확대해 토지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하천구역 지정 시 소유자에게

이율려, 강 의원은 “하천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하천 정비사업은 50프로가 채 되지 않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 주인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용구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하천부지로 지정되면 그 용도가 크게 제한돼 거래가격이 10분의 1수준이 된다”면서 “남모르게 하천부지로 지정된 땅은 이 땅의 소유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도내 일부 시유지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땅 소유권자들이 이보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십년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는 2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렴 문화 확산 ‘앞장’

도의회,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대표는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협약은 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의원, 사무처 직원, 한국투명성 기구 이상학 공동대표와 조숙진 이사, 유한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앞으로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과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이행계획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행정과 교육활동,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청렴도 향상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아태 마스터스,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이병철 도의원, 전북도에 관광자원 발굴 등 주문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은 26일 2023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통해 전북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와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평창 올림픽 남북한 공동 입장장의 물꼬를 튼 ‘무주 세계대전 도선수권대회’ 경험을 밝힐 것을 삼아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3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북한선수들의 참석을 이끌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노력할 것을”을 주문했다.

미지막으로, “대회가 마무리 된 이후, 대회 개최의 성공적 주제를 발판 삼아 국제행사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관련 국제기구 유치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해야”

김명지 도의원, “제도 악용 페이퍼컴퍼니 만연”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5)은 26일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 원, 전문공사 등의 경우 10억 원 미만인 입찰에 대해 지역제한을 적용해 입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악용한 페이퍼컴퍼니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란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타 지역업체가 해당지역 내 주소지인 데서 유사한 회사를 설립해 지역제한입찰에 참가, 낙찰만 받고 실제 용역은 계약금액보다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줘 부당이득을 쟁기는 자격미달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는 대부분 기술자 허위 등록, 자격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입찰조건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도내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율과 확보 기회를 박탈하고, 일주차인 공공기관은 불법 하도급 업체가 저가로 설계·시공한 결과물을 납품받음으로써 부실공사, 신기술 미적용, 예산초과 등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호상 기자